
고용노동부 업무보고

2022. 7. 15.

순 서

I. 일반 현황	1
----------------	---

II. 핵심 추진과제	2
-------------------	---

1. 노동시장 개혁	2
------------------	---

2. 중대산업재해 감축	4
--------------------	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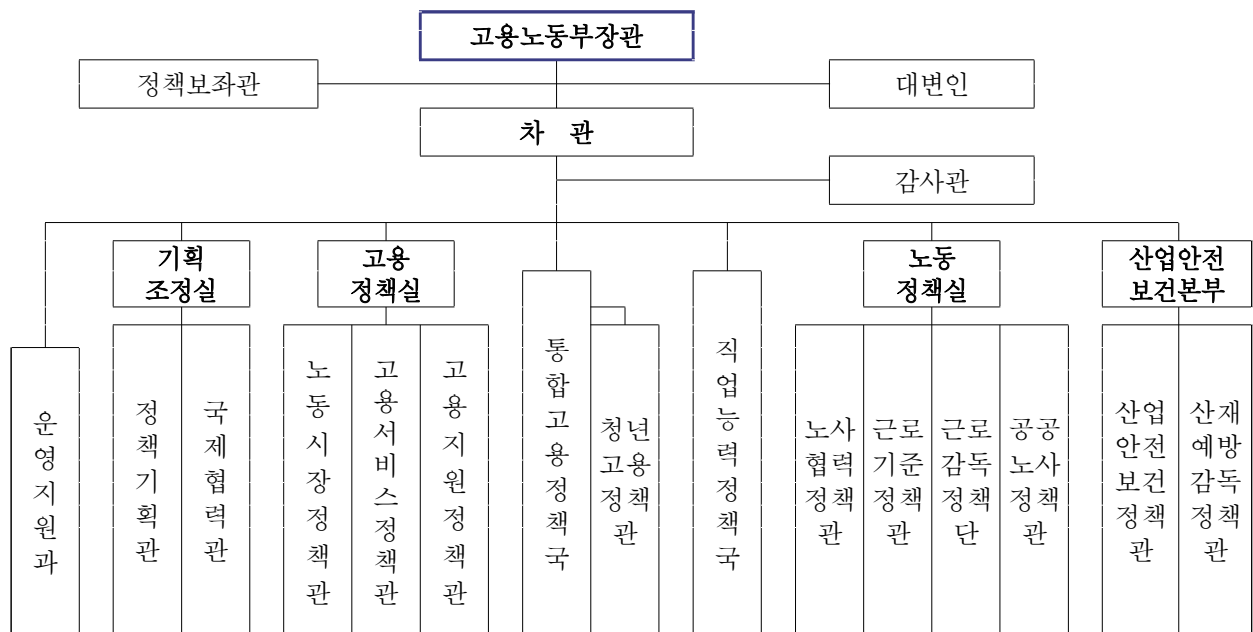
3.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	6
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I. 일반 현황

□ 기구 및 조직 현황

- 고용정책 총괄, 합리적 노사관계·근로조건 보호 등 노동정책 수립·시행

* (본부: 3실 1본부) 고용·노동·기획실 및 산업안전보건본부로 구성, 정책 수립 기능 (소속기관 등) 지방관서(48개), 경제사회노동위원회·노동위원회 등 위원회(16개), 고객상담센터



□ 예산 현황

- '22년 고용부 예산 총 36조 5,720억원, 이 중 일자리 예산은 24.5조원으로 정부 전체 일자리 예산*(31.6조원)의 77.6%

* 분야별 구성: 직업훈련(2.5조원), 고용서비스(2조원), 고용장려금(8조원), 창업지원(2.8조원), 직접일자리(3.4조원), 실업급여(12.7조원)

(억원, %)

구 분	'21년 예산 (A)	'22년 예산 (B)	증 감 (B-A)	%
■ 고용노동부 예산(a+b)	356,487	365,720	9,234	2.6
- 예산지출(a)	70,672	70,993	322	0.5
- 기금지출(b)	285,815	294,727	8,912	3.1

↳ 고용보험(19조원), 산재보험(9조원), 장애인(7.7천억원), 임금채권(7천억원), 근로복지(2.8천억원)

II. 핵심 추진과제 1 : 노동시장 개혁

1 필요성

- 노동시장 이중구조,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 지속,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로 인한 새로운 이슈* 부각
 - ▲ (디지털 전환) 일하는 방식 유연화, 고용형태 다양화
 - ▲ (인구구조 변화: 저출생·고령화) 생산가능인구 감소, 노동생산성 저하
 - ▲ (MZ세대 등장) 노동과 직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(공정한 보상, 실리) 등
-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·제도·관행은 경제·사회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,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와 보상에도 걸림돌

❖ 낡고 경직적인 노동규범·관행은 과감히 혁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강화 → 기업 현장 어려움 해소 및 구조적 문제 해결

2 추진 계획

① [우선 추진과제] 근로시간·임금체계 개편

- 핵심 근로조건,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근로시간·임금체계 개편
 - [근로시간] 근로시간 단축 기조 下, 노사 자율적 선택권 확대
 - 장시간 근로 관행, 과로사 등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건강보호 조치 병행(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) 등 합리적 대안 마련
 - [임금] 노사 자율 영역, 과도한 연공성 완화 및 공정한 보상 시스템 확산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령자 계속고용(정년연장 등) 기반 마련
- 전문가 중심 「미래 노동시장 연구회」 구성·운영(7월3주~)
 -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입법 등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

② [추가 개혁과제] 노사 논의 등을 통한 과제 발굴·추진

□ 고용형태 다양화 등에 따른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, 산업전환에 따른 원활한 이·전직 지원 등 여전히 많은 현안이 존재

- 경사노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 대화 추진, 논의과제·세부운영방식 등은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여 결정

❖ 아울러, 현장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·미조직·저임금 근로자 권익은 두텁게 보호

- 청년 공정채용 확산을 위한 지도·점검* 및 제도개선 추진**

* 「채용절차법」 지도·점검(5.16~7.22)·건설현장 채용 강요 근절

** 「채용절차법」을 「공정채용법」으로 전면개정 추진(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개정안 마련)

- 청년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근로환경 집중 지도·점검*

*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지도·점검하는 「현장예방점검의 날」 운영(분기별),
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 추진('22.下),
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한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 지원 등

❖ 법 테두리 內 대화와 타협,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·연대의 노사관계 구축 노력도 병행

- (중앙) 경사노위를 창구로 한 사회적 대화 기조 유지

- (개별) 노사 자율의 갈등해결 기조 확립, 사업장 불법점거,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불문 엄정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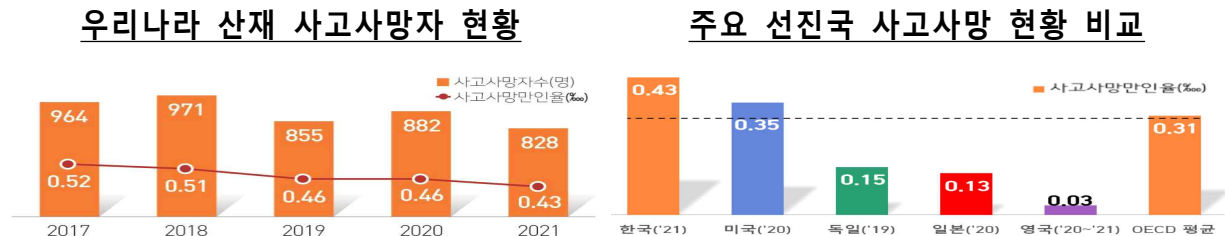
* 지방관서별 '교섭지원단' 운영 → 동향 모니터링, 노사 간 자율적 갈등 해결 지원
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은 범부처 관리체계 통해 대응

II. 핵심 추진과제 2 : 중대산업재해 감축

1 정책 여건

□ 우리나라 사고사망만인율은 영국 1970년대, 독일·일본의 1990년대 수준*

* 사고사망만인율(‰): 영국 0.34('74.), 독일 0.42('94.), 일본 0.46('94.) vs 한국 0.43('21.)



○ 규모소규모, 업종건설·제조업 등 취약분야 중심 사망사고 다수 발생

* ▲50인 미만 사업장: 81% ▲건설업: 50%, 제조업: 22% ▲추락: 42.4%, 끼임: 11.5%

**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고사망 증가세(전년동기대비 67%↑, '22.6월말)

□ 금년 6월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사고사망자*는 감소하고 있으나,

* [전체] 340 → 320명(△20명, △5.9%) [50인(억) 이상] 127 → 120명(△7명, △5.5%)

○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비율 절반 수준* → 안전 문화·관행 변화 미흡

* '22.1월~6월 감독 사업장 7,529개소 중 법 위반 사업장은 3,385개소(45%)

2 추진 계획

① 「중대재해 감축 로드맵」 수립·추진

□ 5년 내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 진입을 위한 중대재해 감축 목표 수립 및 추진계획 마련(10월 중)

[예시: 중대재해 감축 추진방향]

- [자율과 책임] ▲(現) 정부 규제·감독 → (改) 위험성 평가 기반 자율 예방체계 구축
- [노사 참여] ▲(現) 사업주 중심 → (改) 노·사 공동(위험요인 공동 발굴·개선 등)
- [예방 지원] ▲(現) 물량 위주, 획일적 → (改) 맞춤형·스마트 기술 지원 확대
- [新 위험요인 대비] ▲직업성 질병·암 예방체계 구축 등

② 산업재해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 지원

- **[예방역량 강화]** 소규모, 하청 사업장 등 대상으로 재정지원 및 컨설팅 확대('22. 1.1조원, 지속확대 추진)

- **[소규모]** 유해·위험 시설 개선비용 지원('22. 4,508억원), 기술지도(34.6만개소), 중대법 적용 대비 컨설팅(3.5천개소) 등 확대
- **[하청]** 원하청 상생 협력 지원('22 대기업 900개소) → 우수기업 감독면제 등 대기업 참여 촉진

- **[점검·감독·환류]** ❶ 감독 타겟 고위험사업장 자율 점검(업종·규모별 가이드 및 체크리스트 보급) 후, 취약 현장 중심 감독* 활성화

* 기본 안전조치 준수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작동 여부 등 중점 확인

- ❷ 업종·취약요인별 건설·제조 등 사고다발 유형별 원인 분석 및 산업·고용동향(계절적 요인 등 사고위험↑)과 연계한 집중 감독

* 업종·규모별 다발 사고는 안전지침 등을 선제적으로 배포하여 재발 방지

- ❸ 감독 환류 감독결과를 CEO에게 직접 통보하여 실질적 개선 유도

- **[안전문화 확산]** '기초 안전질서 준수' 캠페인 및 노·사단체, 개별 노동자 참여를 통한 안전 인식 제고

* 배달라이더 등 특고·플랫폼종사자 대상 산재예방 정보 제공(관계부처 협업), 노·사 공동 안전패트롤(순회점검 등) 및 '작업 전 안전점검'(Tool Box Meeting) 생활화 등

③ 「중대재해처벌법」 현장 수용성 제고

- 시행령 개정*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 조속히 해소(~'22.)

* '충실히' 등 모호한 규정 정비, 안전·보건 관계 법령 구체화 등

- 처벌규정 등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개선방안 마련

④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재활 - 직업복귀 연계 강화

-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특고·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('23.7월~)

* ('08 ~ '21년) 15개 직종, 78만명 → ('22.7.1 ~) 3개 직종, 12만명 추가 적용

- 산재병원 진료(재활, 화상 등) 전문화 및 맞춤형 '치료·재활 - 직업훈련 - 일자리' 연계 등을 통해 조기 직업복귀 지원 강화('22.~)

II. 핵심 추진과제 3 :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

1 정책 여건

- 산업전환 가속화, 저출생·고령화 등 노동시장 구조 전환 본격화, 엄중한 경제 상황(고물가 등) 속 구직자·기업의 일자리 어려움 가중
 - 청년은 취업지연과 구직포기, 여성은 경력단절로 노동시장 이탈, 반면 기업은 인력난 호소
- 최근의 일자리 어려움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력 저하와 함께, 적극적 노동시장정책*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

* (역할) 구직자 취업지원, 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 지원, 직업훈련 등

2 추진 계획

❖ 공공 단기일자리·소득지원 방식에서 벗어나, 기업·개인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로 노동시장 활력 제고

분야	As-is	To-be
기본 방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공 중심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등 노동시장 충격대응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, 생산인구감소 등 미래 대응
실천 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정투입을 통한 소득지원 확대 직접일자리, 고용장려금 중심 고용안전망 보호범위 확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업지원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 직업훈련, 고용서비스 중심 고용안전망의 Activation 강화

①일자리사업
효율화

②기업
인력난 해소

③노동시장
진입촉진

④고용서비스
고도화

⑤고용안전망
+
Activation

① 일자리사업 효율화

* ('22) 25개 부처, 186개 사업, 31.6조원

- 유사중복·저성과 직접일자리 사업 등은 폐지·감액*, 매년 데이터 기반 평가를 통해 일자리사업 효율화 추진

* (단계적 폐지, 11개) 지역 디지털 일자리 등, (감액, 32개) 전통스토리계승 및 활용 등

② 기업 인력난 해소

- **[신기술분야 인재양성]** 디지털 선도기업·혁신훈련기관 등* 활용, AI·빅데이터 등 디지털·신산업 분야 인재 18만명('24년) 신속 양성

* 디지털 선도기업(삼성, KT 등), 민간 혁신훈련기관(멧쟁이 사자처럼, 앨리스 등)

- 특히, 반도체 분야는 실제 기업(SK하이닉스 등)과 같은 생산장비를 활용, 현장 적합도 높은 훈련 확대

✓ 반도체클러스터 인근 폴리텍 캠퍼스 및 공동훈련센터 등 활용, 3천명 양성('22)

✓ 폴리텍: (학위과정) 2년간 1,440시간(전공 1,280, 교양 160), (비학위) 10개월간 1,200시간

↳ 4년제 학위과정(전공 830시간)에 비해, 단기간에 더 많은 시간, 현장중심 훈련 실시

- **[재직자 역량 강화]** 재직자 능력개발 전담주치의(커리어닥터) 및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훈련 컨설팅 도입('23.~)

- “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” 신설 등 기업에게 훈련과정 자율 편성·운영권 부여(「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」 방안 발표, 7월)

- **[구인 애로요인 해소]** 기업유형에 따라, 인사·노무컨설팅부터 고용 환경개선까지 종합 지원하는 「기업도약보장패키지」도입('23.~)

- 입국 대기 중 외국인력(E-9, 5만명) 신속 도입*·신규인력 배정 확대**

* 입국인원 확대(8월 이후 월별 1만명 이상 목표) ** (기존) 14천명→(확대) 21천명(7월)

③ 구직자·잠재인력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

- **[맞춤형 역량강화]** AI기반 개인 취업역량 진단시스템(Job care), “진로지도+훈련+일자리정보” 패키지 지원 시행('23.~)

- 재학·일학습병행 신산업분야로 확대('23.), ^{이전직}산업전환 특화훈련 지원('22~) 등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 강화

□ **[대상별 취업지원]** 노동시장 진입·복귀 관련 제약요인 해소

- (청년: 일경험 + 조기개입) 민관협업 기반 유형별(직무탐색형, 기초 역량형, 실전역량형) 일경험 확대 등 「일경험 활성화 로드맵」 마련(9월)
 - 대학일자리센터(116개소) 중심 대학 1~2학년부터 경력설계·훈련·일경험을 지원하는 「청년도약보장 패키지 추진방안」 마련(9월, '23년 시행)
- (여성: 경력단절방지)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
- (고령자: 계속 고용) 임금체계 개편 등과 연계, 사회적 논의 추진

4 기업·구직자를 연결하는 고용서비스 고도화

- 고용복지+센터 중심 고용서비스 전달체계* 연계 강화, 취업지원 확대 등 포함 「국가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혁신방안」 발표(4분기)
 - * 고용복지+센터 102개소, 새일센터 158개소, 중장년센터 31개소, 대학일자리센터 116개소 등
- 비대면 지원금 신청, AI 기반 일자리·인재 추천 등 “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(고용 24)” 신설(7월 시범사업 → '23년말 구축)

5 튼튼한 고용안전망으로 노동시장 내 원활한 이동 지원

- **[취업자]**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단계적 고용보험 적용 확대
 - * 고용보험 가입 현황(만명, 5월말 기준): △근로자 1,479 △특고 65 △플랫폼종사자 31
 - 실업급여 반복 수급 개선 대책* 마련, 구직활동 의무 강화(Activation)**
 - *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단계적 감액(5년간 3회 이상 수급시 3회 10%, 4회 25%, 5회 40%, 6회 이상 50%), 이직 다수 발생 사업장 보험료를 추가 부과 <법안 국회 계류 중>
 - ** 의무 확대(4주당 1회 → 2회), 구직활동 촉진(어학수강·취업특강 X, 입사지원 0) 등
- **[비경제활동인구]** 한국형 실업부조인 '국민취업지원제도*' 청년 재산 요건 완화 등 지원대상 확대** 및 조기취업 유인 강화
 - * 저소득 장기실업자, 청년 니트, 근로빈곤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('22, 60만명)
 - ** (7월~) (기존) 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 → (변경) 5억원 이하 등

❖ 노동시장 상황 면밀히 모니터링, 하방리스크가 경기침체와 고용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한 대비 철저

